2017년 국가직 7급 행정학(17. 8. 26) - 다 책형

국가직 7급 시험 총평

이번 국가직 7급 행정학 문제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난도가 높은 시험에서 합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틀리지 말아야 할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정책유형, 규제정치모형, 소청심사, 근평 등 **수업시간에 수없이 강조했던 나머지 문제들을 모두 맞춘 수험생들이 분명 합격에 가까이 가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 7번 문제인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모형과 9번 문제의 '정책학습' 모형은 기존의 이론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출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렵게 느껴지는 **여러 문제를 이미 수업시간에 충분히 연습**한 바 있습니다.
- dBrain system문제는 노무현 정부의 4대재정 개혁의 주요내용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줄여서 부르는 이름임을 수업시간에 소개한 내용이었습니다.
- 「공공기관운영법」과 관련된 문제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되려면 최소 50인 이상이 되어야함을 PPT를 통해 도식화하며 강조한 바 있습니다.
- 상수도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한 규제는 윌슨의 기업가 정치에 대표적 사례로 소개한바 있습니다.

최근 수험가에서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험준비를 위해 당연하고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기출문제의 정답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수험을 준비하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한 접근방식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보았듯이 기출문제의 출제영역에 대해 수업을 통해 이해가 선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암기와 문제에 대한 반복적 적응훈련이 되어야 진정한 수험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과가 실망스러운 분들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직 7급 시험과 하반기 추가 채용시험 등 아직 시험이 남아있는 만큼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신용한 드림

출제유형분석

총론	2	재무행정론	4
정책론	4	정보화사회와 행정	1
조직론	4	행정환류	-
인사행정론	4	지방행정론	1

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④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해설 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 기획재정부 장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 **동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 ·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 [○] 동법 제5조 제3항

> **동법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 1. 공기업
>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2. 준정부기관
>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④ [○]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평가한다. 다만 신규 지정된 해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동법 제48조【경영실적 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목표와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 ·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변경지정을 제외한다)된 해에는 경영실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79~382

▶ ②

02 리플리와 프랭클린(Ripley & Franklin)은 정책유형에 따라 집행과정의 특징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정책유형은?

> ○ 집행과정의 안정성과 정형화의 정도가 높다.
> ○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가 낮다.
> ○ 집행을 둘러싼 이념적 논쟁의 정도가 낮다.
> ○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이 높다.
> ○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의 정도가 낮다.

① 분배정책
② 경쟁적 규제정책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재분배정책

해설 ① [×] 분배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정책유형별 비교〉

구 분	안정적 절차 (routine) 확립	참여자 간 관계의 안정성	공무원의 집행에 대한 반발	집행에 대한 갈등의 정도	이념적 논쟁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와 압력
분 배	**높다**	**높다**	**낮다**	**낮다**	**낮다**	**낮다**
경쟁적 규제	보통	낮다	보통	보통	다소 높다	다소 높다
보호적 규제	낮다	낮다	높다	높다	높다	높다
재분배	낮다	낮다	높다	높다	매우 높다	높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88

▶ ①

03 dBrain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② dBrain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도입이 가능해졌다.
③ 예산편성, 집행, 결산, 사업관리 등 재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연계 처리하도록 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다.
④ 노무현 정부 당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이 추진되었다.

해설 dBrain System(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 회계, 정보의 국면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연계하여 재정전체 업무처리가 동일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관련정보가 생성되는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을 의미한다.

①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은 UN 공공행정상 정보화시대 정부 접근방식 제고 부문 대상에 선정된바 있다.

②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이 구축되어야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Top-down)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국가재정운용계

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성과관리제도, 프로그램예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등 재정혁신 시스템과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

④ [○] 노무현 정부의 4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구축되었다. 2004년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이 설치되었고, 2004~2006년에 걸쳐 시스템을 설계·구축하였으며, 2007년 공식적 가동을 시작하였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701

▶ ②

04 SWOT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 내적 특성과 외부 환경의 조합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수립에 도움이 된다.

② 조직 외부 환경은 기회와 위협으로, 조직 내부 자원·역량은 강점과 약점으로 구분한다.

③ 다양화 전략은 조직의 강점을 활용하여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기존 프로그램의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해설 ④ [×] 기존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폐지는 약점-기회를 고려한 방향전환전략(WO전략)이다. 방어적 전략은 조직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극복(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WT전략) 것이다.

〈TOWS(SWOT)분석 방법〉

내부환경 / 외부환경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 (Opportunity)	SO 전략(공격적 전략) 조직의 강점을 기반으로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WO 전략(방향전환전략) 조직의 약점을 보완해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위협 (Threat)	ST 전략(다양화 전략) 조직의 강점을 기반으로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WT 전략(방어적 전략) 조직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38

▶ ④

05 미국 민주주의의 규범적 관료제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제퍼슨주의(Jeffersonianism)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한 행정책임을 강조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과정을 중시한다.

② 잭슨주의(Jacksonianism)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한다.

③ 메디슨주의(Madisonianism)는 국가이익의 증진을 위해 강한 행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한다.

④ 해밀턴주의(Hamiltonianism)는 다원적 과정을 통한 이익집단 요구의 조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견제와 균형을 중시한다.

해설 ② [×] 잭슨주의는 정당이 관직을 차지하는 엽관주의를 실천원리로 한다.
③ [×]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하는 것은 해밀턴주의이다.
④ [×] 이익집단의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매디슨주의이다.

〈미국 규범적 관료제 모형〉

해밀턴(Hamilton) **연방주의**(중앙집권)	• 초대 재무장관이었던 해밀턴은 연방주의자로서 중앙집권화에 의한 능률적 행정방식이 최선임을 주장 •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행정의 유효성을 지향함.
제퍼슨(Jefferson) **자유주의**(지방분권)	• 3대 대통령인 제퍼슨은 해밀턴의 연방주의를 반대 •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소박하고 단순한 정부와 분권적 참여를 중시 •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의한 민주적 행정이 최선임을 주장
매디슨(Madison) **다원주의**	• 4대 대통령인 매디슨은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내 다양한 이익집단의 존재를 중시 • 이익집단들 간의 견제와 균형의 유지가 중요함을 주장
잭슨(Jackson) **민주주의**(엽관주의)	• 7대 대통령인 잭슨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차지하는 엽관주의를 도입(1829) • 공직교체와 공직개방을 골자로 하는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원리로 도입하게 됨.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117

▶ ①

06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new performance budgeting ; result-oriented budget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결과 지향적 예산제도의 일환으로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도입했다.

② 각 부처 재정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다.

③ 재정사업의 목표, 결과, 재원을 연계하여 예산은 '성과에 대한 계약'의 개념으로 활용한다.

④ 20세기 후반부터 주요 국가들이 재정사업의 운영과정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해설 ① [×] 클린턴 행정부 때 예산혁신과 관련한 대표적인 개혁법은 1993년도에 제정한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GPRA)이다.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은 부시 행정부에서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GPRA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② [○]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재정사업 담당자들에게 재원 배분과 관련해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분권화된 인센티브 체제를 만들었다.

③ [○]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제의 원칙은 사업의 목표, 결과, 그리고 재원을 모두 연계해 예산을 '성과에 대한 계약'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④ [○] 1990년대 이후 주요 국가들은 예산서의 형식보다 재정사업 운영 '과정'이나 '기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성과주의 예산체제를 설계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94

▶①

07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가 제시한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구성(Social Construction of Target Population)'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적 형상(Social Image) /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	긍정적	부정적
높음	수혜집단 (Advantaged)	주장집단 (Contenders)
낮음	의존집단 (Dependents)	이탈집단 (Deviants)

*** 사회적 형상 :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이 정책대상집단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인식**

*** 정치적 권력 : 다른 집단과의 연합형성의 용이성, 동원 가능한 보유자원의 양, 집단구성원들의 전문성 정도**

① 사회문제를 설명할 때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사건에 대한 가치부여 등에 관한 해석을 가급적 배제하고자 한다.

② 특정 정책대상집단이 둘 이상의 유형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그 사회적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③ 정책설계 및 집행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객관적 분석으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향한다.

④ 정책설계는 기술적인(technical) 과정이므로 어느 집단의 이익을 더 많이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해설 생소한 문제인만큼 관련 용어 해설과 Hint를 일부 숨겨두었다. 보기 1번에서는 문제의 주어진 내용과는 다르게 이미지와 사람에 대한 가치부여 등을 해석에서 '배제'한다고 하였으며, 보기 3번의 경우 '단순화'시킨다는 표현을, 보기 4번의 경우 '~논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용어를 사용하여, 정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다만, 표가 제시되고 지문이 길며, 생소한 내용이라는 부분이 체감 상 어려운 문제로 인식될 수 있었다.

① [×] 잉그람과 슈나이더(Ingram & Schneider)는 사회적 형성 속에서 정책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현실의 사회문제를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이미지, 고정관념, 사람이나 사건 등의 가치에 대한 해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② [○], ③ [×] 해당 모형의 기본가정은 가치중립적이거나 객관적 실제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국가·시기별로 형성된 특정집단이 다양하므로 단순화하는 방법론을 지양하게 된다.

④ [×] 실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합리성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정책 설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재가 가해지는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게 되는지 논쟁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②

08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아닌 것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② 「정부기업예산법」
③ 「군인연금특별회계법」 ④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①, ②, ④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역발전특별회계), 정부기업예산법(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은 「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③ [×] 군인연금은 기금으로 설치·운용한다(군인연금특별회계법은 존재하지 않음). 군인연금법에 따라 군인연금기금을 설치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09

▶ ③

09 정책학습(policy learning)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버크랜드(Birkland)가 제안한 '사회적 학습'은 하울렛과 라메쉬의 '외생적 학습'과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하울렛과 라메쉬(Howlett & Ramesh)의 '내생적 학습'은 정책 문제의 정의 또는 정책목적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한다.
③ 로즈(Rose)의 '교훈얻기(도출) 학습'은 다른 지역의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조사·연구하여 창도자의 관할지역에 도입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미리 평가하는 것이다.
④ 정책학습의 주체는 정책집행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조직일 수도 있고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개인, 조직 또는 정책창도연합체(advocacy coalition)일 수도 있다.

해설 정책학습은 학자에 따라 그 강조점이 약간 상이하지만 본질적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① [○] 버크랜드는 메이(May)와 유사하게 정책학습을 수단적 정책학습, 사회적 정책학습, 정치적 학습의 세 범주로 구분하였다.

수단적	정책도구 또는 집행설계의 실현가능성과 정책개입의 유효성에 대한 학습
사회적	문제의 원인에 대한 학습,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사회적 구성에 대한 학습
정치적	주어진 정책 아이디어나 문제를 옹호하는 전략에 대한 학습

② [×] 정책학습은 원천(source)과 동기가 정책과정 내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데 따라 내생적 학습과 외생적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정책의 기법들을 배우고, 바꾸는 것이 내생적 학습이라면, 외생적 학습은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문제 자체에 대한 의문제기를 포함하여, 외부환경 변화에 정책결정자들의 활동을 정책학습으로 본다.

외생적	외부적인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대응을 바꾸어 나가는 것
내생적	과거에 수행했던 정책의 결과들과 새로운 정보들에 비추어 보아 정책목적들과 기법들을 바꿀 것을 모색하는 것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87

▶ ②

10 예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루이스(Lewis)는 예산배분결정에 경제학적 접근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가치', '증분분석', '상대적 효과성'이라는 세 가지 분석명제를 제시한다.

② 니스카넨(Niskanen)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의회 의원들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구 예산을 극대화하는 형태에 분석초점을 둔다.

③ 윌로비와 서메이어(Willoughby & Thurmaier)의 다중합리성 모형은 의원들의 복수의 합리성 기준이 의회의 예산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④ 단절균형예산이론(Punctuated Equilibrium Theory)은 급격한 단절적 예산변화를 설명하고, 나아가 그러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설 ① [○] 루이스는 상대적 가치, 증가분의 분석, 상대적 효과성 등의 예산결정의 세 가지 경제학적 명제를 제시하였다.

② [×] 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 모형은 관료의 예산행태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니스카넨은 관료가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소속 부서의 예산 규모를 극대화한다고 설명했다.

③ [×] 다중 합리성 모형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모두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관료들의 정부 예산(의원들의 의회 예산결정×)의 과정적 접근 방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분석한다.

④ [×] 단절균형예산이론은 사후 분석적으로는 적절하지만 단절균형이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접근방법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33, 636

▶ ①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단체교섭대상은?

①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② 조합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③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④ 정책의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해설 ①, ③, ④ [×] 단체교섭의 제외대상은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

② [○]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과 관련되는 사항,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이다.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정부교섭대표"라 한다)과 각각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44, 545

▶ ②

12 매슬로(Maslow)의 욕구단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장 낮은 안전의 욕구부터 시작하여 다섯 가지의 위계적 욕구 단계가 존재한다.
② 안전의 욕구와 사회적 욕구는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첫 번째 욕구단계인 존재욕구에 해당한다.
③ 어느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사회적 욕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자신감, 성취감 등을 의미한다.

해설 ① [×] 매슬로(Maslow)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생리적욕구-안전욕구-사회적욕구-존중욕구-자기실현의 욕구 순으로 제시하였다.
② [×] 사회적욕구는 엘더퍼(Alderfer)의 ERG이론의 관계욕구(Relatedness Needs)에 해당한다.
③ [○] 한 단계의 욕구가 완전히 또는 절대적으로 충족되어야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되는 것이 아니라 하위계층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된다.
④ [×] 사회적 욕구는 소속감을 느끼는 상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 우정, 친교 등을 의미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91, 392

▶ ③

13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공식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조직구성원들의 재량이 증가한다.
② 통솔범위가 넓은 조직은 일반적으로 고층구조를 갖는다.
③ 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요구는 집권화를 촉진한다.
④ 복잡성은 '조직이 얼마나 나누어지고 흩어져 있는가'의 분화정도를 말한다.

해설 ① [×] 공식화는 조직 내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높을수록 구성원의 자율 · 창조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 통솔범위가 넓어지면 계층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저층(고층 X)구조를 갖게 된다.
③ [×] 고객중심적인 서비스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권화를 촉진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30, 331, 339

▶ ④

14 다음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윌슨(Wilson)의 규제정치 유형은?

> A시와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 2월까지 B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음식점 70곳을 단속해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5명을 벌금 500만~3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에 해당 유역 8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상인대표단은 11일 "B상수원 환경정비구역 내 휴게·일반음식점 규제·단속은 형평성이 결여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다.

① 고객정치
② 대중정치
③ 이익집단정치
④ 기업가정치

해설 ④ [○] 지문은 환경오염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비용은 좁게 집중되어 있고 편익은 넓게 분산되어 있는 기업가정치 유형에 해당한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구 분		규제의 편익	
		넓게 분산	좁게 집중
규제 비용	넓게 분산	• 대중정치(다수결정치) : 편익과 비용 모두 분산 • 수혜자 · 비용부담자 모두 집단행동딜레마 발생 음란물규제, 낙태규제 등	• 고객정치 : 편익 집중, 비용 분산 • 수혜자 집단에 의한 포획 시도. 쉽게 추진, 주로 경제적 규제와 연관 수입규제, 직업면허, 환경규제 완화 등
	좁게 집중	• 기업가 정치 : 편익 분산, 비용 집중 • 비용부담집단(피규제집단)에 의한 포획 시도. 느슨한 정책집행이 발생, 주로 사회적 규제와 연관 환경오염규제, 퇴폐업소단속, 외제차에 대한 수입규제완화 등	• 이익집단정치 : 편익 집중, 비용 집중 • 서로의 이익 확보를 위한 집단 간 대립 한약분쟁, 의약분업규제 등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32

▶ ④

15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한다.
② 사업별 보조율은 50%로 사업비의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③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에서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① [×] 내국세 총액의 일정비율과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지방교부세이다.

② [×] 사업별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①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③ [○] 국고보조금은 강력한 감독 · 통제성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가장 안정성과 자율성이 없는 재원이다.

④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X)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동법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명세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869, 870

▶ ③

16 미헬스(Michels)의 '과두제의 철칙(iron law of oligarchy)' 현상에 가장 부합하는 조직목표 변동 유형은?

① 목표 대치(displacement)
② 목표 확대(expansion)
③ 목표 추가(multiplication)
④ 목표 승계(succession)

해설 목표의 대치란 조직의 목표 추구가 왜곡되는 현상으로, 과두제의 철칙 외에도 규치과 절차에 대한 지나친 집착, 지나친 유형 목표의 추구, 조직 내부문제 중시 등이 일어날 때 발생한다.
① [○] 목표의 대치현상은 과두제의 철칙이 일어날 때 발생한다. 과두제의 철칙은 조직의 최고관리자나 소수의 간부가 일단 권력을 장악한 후에는 조직의 본래 목표를 추구하기 보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 · 강화시키는데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225

▶ ①

17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에 대해 권고와 같은 효력이 있다.
② 강임과 면직은 심사대상이나 휴직과 전보는 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설치되어 있다.
④ 지방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은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설 ①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인정되어 처분청을 기속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사 청구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면 그 청구를 각하(却下)한다.
2.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그 청구를 기각(棄却)한다.
3.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 행정청에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4.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5.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의무 이행을 구하는 심사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청구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② [×] 소청대상은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면직, 전보 등) 등이 해당한다.
③ [×]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시 · 도(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13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공무원의 징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소청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별로(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78

▶ ④

18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크게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6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 '성과계약 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나눌 수 있으며,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한다.
③ 다면평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역량평가제도는 5급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지를 평가한다.

해설 ① [×]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과계약 등 평가'와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 '근무성적평가'로 구분된다.
② [×] '성과계약 등 평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③ [○] 다면평정법은 소수인의 주관과 편견, 개인 편차를 줄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을 수 있는 제도로 통제의 목적보다는 능력발전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④ [×] 역량평가제는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 요구되는 역량(5급 신규 임용자×)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514, 518, 520

▶ ③

19 고위공무원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위공무원단으로 관리되는 풀(pool)에는 일반직공무원 뿐만 아니라 외무공무원도 포함된다.
② 적격 심사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면직이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 전보다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되었다.
③ 고위공무원단 직무 등급이 2009년 2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급중심의 인사관리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④ 고위공무원단의 구성은 소속 장관별로 개방형 직위 30%, 공모 직위 20%, 기관자율 직위 50%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 ① [○] 고위공무원단은 실 · 국장급 이상 일반직 · 별정직과 외무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 부지사 ·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직을 포함하여 약 1,500여 명으로 구성된다.
② [×]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의 평정에 따르되, 고위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하고 부적격자는 직권면적이 가능

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완화되었다.

③ [×] 고위공무원단은 1급, 2급, 3급을 통합하여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한 것으로 계급제에 직위분류제의 요소를 도입한 것이다.

④ [×] 고위공무원단은 개방형직위(20%), 공모직위(30%), 기관 자율인사직위(50%)로 이루어져 있다.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462, 463, 464, 466

▶ ①

20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행정개선 사례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서울청사 등에 스마트워크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민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민원24'를 도입하였다.

③ 정부에 대한 불편사항 제기, 국민제안, 부패 및 공익 신고 등을 위해 '국민신문고'를 도입하였다.

④ 공공기관의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발주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도록 '온나라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해설 ④ [×] 나라장터에 대한 설명이다. 온나라 시스템은 정부 부처, 정부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사용하는 업무 처리 전산화 시스템이다. 온나라 시스템은 과제수행계획에서부터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는 업무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통합화·체계화한 시스템으로서 개별 공무원이 행하는 보고·의견제시·회의·지시사항 등 일체의 관련 내용을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축적·활용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정부의 디지털 중추신경망).

참고 2018 compass 행정학 p.680, 725

▶ ④